

4·3의 내일을 말하다

4.3운동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1. 4. 28.^(수)
13시~1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
(제주시 명신1길 11, 1층)



4·3의 내일을 말하다

4.3운동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1. 4. 28.^(수)
13시~1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
(제주시 명신1길 11, 1층)

진행순서

목차

구분	시간	내용
등록 및 개회	13:00~13:30	<사회 : 좌광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
1부	13:30~14:30	<초청특강 : 김명식 시인>
휴식	14:30~14:40	휴 식
2부	14:40~15:50	<p>주제 : 4·3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좌장 : 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장></p> <p>● 지정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 김동현 제주민예총 정책위원장 ○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위원장 ○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휴식	15:50~16:00	휴 식
3부	16:00~17:00	<p>주제 : 청년, 4·3의 미래를 말하다 <좌장 : 김태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p> <p>● 지정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건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 신동원 (사)제주다크투어 시민참여팀장 ○ 임그린 제주여민회 4·3과여성위원회 위원 ○ 조수진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1부 초청특강	
○ 김명식 시인	4
2부 토론문(주제 : 4·3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26
○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28
○ 김동현 제주민예총 정책위원장	30
○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32
○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위원장	36
○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40
3부 토론문(주제 : 청년, 4·3의 미래를 말하다)	
○ 박건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44
○ 신동원 (사)제주다크투어 시민참여팀장	48
○ 임그린 제주여민회 4·3과여성위원회 위원	52
○ 조수진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54
○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62

4·3민족, 민중항쟁(해방)을 말한다 -내일의 4·3의 희망과, 바람은...

다사함

I. 문제제기

1948년 4월.

미점령군, 경찰, 경비대 그리고 이승만집단의 우익 테러에 항거하다 스러져간 제주도 민중의 혼은 깊은 한과 염원을 간직한 채, 현대사 40년간의 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제주도 민중학살에 앞장섰던 자들이 지금도 이 땅의 민중을 지배, 수탈, 착취하는 자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민중항쟁의 기록은 왜곡되어 있고, 드러나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배자들은 이를 역사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우려 하고 있다. 게다가 지배계층은 역사사실을 규명하는 길마저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중의 알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땅의 현대사에는 아직도 1946년 10월 대구민중항쟁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으며 1948년 4월 제주민중항쟁의 기록이 말살되어 있고, 1951년 2월의 거창양민학살, 1974년 4월 인혁당사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등의 진상이 은폐되어 왔다.

제2차세계대전은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으로 그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지배와 착취의 막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땅 위에는 일본제국주의(총독부) 대신에 미제국주의(미군정청)가 지배의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배자인 미국은 패망한 일본에 대해서는 간접점령이란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 땅위에서는 직접점령이란 지배구조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적이며 따라서 적국에 취하는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하라’는 주한미군정청 사령관인 하지의 지령과 ‘점령군의 모든 활동은 적국에 실시하는 관례와 규칙에 따르라’(미 점령군정 공식문서)는 미제국주의의 정책목적과 그 진면목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역사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1948년의 민중항쟁이 제국미국의 직접 점령기에 터져나온 민중들의 처절한 몸짓이었으며 미국의 추악한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 한반도 초유의 사건이었기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국미군군의 점령 3년 사이(1945. 8. 15-1948. 8. 15)에 터진 4·3제주민중의 항거와 투쟁이 누구에 대한 항거였는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가,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4·3제주민중항쟁을 바라보는 여러 그릇된 시각을 살펴보면,

첫째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을 일으킨 자는 빨갱이(남로당)들이며, 이들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이땅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폭도는 빨갱이들이요, 그들을 도와준 자들도 빨갱이요, 그러니 제주도 도민의 85%는 빨갱이다. 때문에 한라산에 휘발유를 뿌려서라도 소탕시켜야 한다” 는 등, 학정에 항거했던 제주도민을 무조건 빨갱이로 전제하고서 단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전후 40여년간 이땅의 현대사를 피로 얼룩지게 한 자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이며 반공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자들의 시각이다. 참으로 무섭고 슬픈 일이다.

둘째로는, 제주도를 빨간 깃발로 덮으려는 의도적 해석이다. 그것은 제주도민의 삶의 방식을 역사 이래 일관된 민중해방사의 맥락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위대한 해방의 과업을 도식적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려는 역사인식이다. 예컨대 “남로당이 주축이 되어서 1948년 4월 3일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의 주체는 남로당이다” 등으로 당시의 사태를 제주도 민중의 생생한 삶을 축으로 하여 파악하지 않고 남로당을 중심으로 보는 이념사적 역사인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주체자를 민중으로 보지 않고 혁명이념의 진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역사이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싸워온 제주도 민중의 주체성을 과소화시키는 결과가 되며, 오히려 제주도 민중을 학살한 장본인들에게 실증적으로 학살의 구실과 명분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남로당이 있기 훨씬 전에도, 남로당이 결성된 후에도, 남로당이 사라진 뒤에도 제주도 민중은 구체적으로 자기 해방을 위해서 일해 왔고 또한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싸우나갈 것이다.

셋째로는, 수난사적 해석이다. 즉,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희생당했다.”는 등의 역사인식이다.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약 10만의 사람들이 살해 당했다. 까닭도 없이 목숨을 빼앗겼다. 살해당한 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제주도민 전체가 총체적으로 희생당했다고 보아야 옳다. 그러나 수난사적 역사인식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살해되었는가 하는 역사사실을 묻어두고 접어 두려는, 공포에 사로잡힌 방관자적 패배주의자의 역사인식인 것이다. 따라서 수난사적 역사인식은 피의 역사를 씻어내려는 회복운동, 즉 억울한 한(恨)을 풀려는 해원(解怨)공사가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인식은 수난을 의도적으로 야기시킨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파쇼집단의 만행을 규명하고, 규탄하는 데까지 이끌어가지 못하고 현상적 치유에 머물러 버리기 쉽다. 수난의 아픔과 희생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恨)을 푸는 구체적 방법론의 모색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특수성을 내세워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역사사실을 규정하려는 운명결정론자의 역사인식이 있다.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느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자생적으로 빨갱이가 될 가능성이 강하다” 느니, “귀향살이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많으니 천성적으로 반골이다” 등의, 이미 제주사회와 제주민중들을 재단하고 규정하고 결정하여, 생동하는 민중의 자체의 성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틀을 가지고 제주도 민중의 삶과 그들의 움직임을 규정하려는 결정론적 역사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열려있는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아 버리고 있으며 생동하는 실체요, 역사의 주인인 민중의 변혁사, 해방사, 혁명사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창조사를 왜곡 이해하며 역사발전을 차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제주 사회의 특수성은 자연적 특수성보다는 제주도 민중의 자기해방을 위한 하나의 독특한 지혜요, 방법이요, 기술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사회에 있어서 제주민중들은 특수하고 독특한 삶의 전략과 전술이 있을 것이요, 이는 바로 자기 삶을 영위함에 있어 침략해 들어오는 외부세력 즉, 적을 물리치는 데 필요불가결한 자기방위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공통점은 스스로가 겪어온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 의한 사건으로 돌려버리고 아예 관심마저 두려고 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데 있다. 물론 엄청난 피해와 공포 앞에서 시달려온

자들은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과거를 망각하려 하고, 아니 오히려 망각을 강요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사실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이유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올바른 역사방향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려는 의지의 발로 때문이요,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을 밟고 살아갈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교훈을 자리잡게 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자들만이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의 역사인식, 이념도식주의자의 역사인식, 수난사적 역사인식, 허무주의적 또는 패배주의적 역사인식 등은 역사의 주인인 주체자로서의 사관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역사인식이 전후 40여년간 이 땅의 지배해 왔으며 재배자들은 이 땅의 민중들을 그러한 역사인식의 틀 속에 묶어두려 해왔다. 이제 우리가 1948년 제주도 민중항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제반 잘못된 역사인식을 먼저 씻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이래 제주도 민중은 누구에 대항해 왔으며 어떠한 체제와 지배착취수탈구조에 항거해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싸워왔는가 하는 민중해방사의 줄기를 파악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1948년 4·3봉기를 재조명 해야 할 것이다. 4·3제주민중항쟁의 주체는 누구였으며 그 주체자의 편에 서서 역사를 걸어갔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또한 당시 제주도 사회의 제반양상 위에서 제주도 민중의 해방이라는 거대한 과업에 저해가 되었던 요소들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점령기에 있어서 미국의 군대는 해방의 역사발전에서 어느 점까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도움 또는 저해가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경찰과 경비대, 재배관료, 이승만 세력, 서북청년단 그리고 토착 우익세력은 해방을 위한 제주민중의 제과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4·3민중봉기의 주역과 배역, 그리고 지배구조인 제국성과 그 영합세력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제주도 4·3민중항쟁의 주체자가 분명해지면, 예컨대 제주도 인민 위원회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민중해방투쟁에 있어서 남로당의 역할과 그 정치적 성격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48년 4월 당시는 대한민국정부는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미군은 연합군 세력의 두목으로 한반도 이남을 지배 점령하고 있었다. 재판권이나 발포권, 교전권 등 모든 주권은 민중에게 있지 않고 미군점령군에 있었다. 따라서 4·3민중투쟁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한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였음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4·3민중항쟁의 직접적 탄압을 수행한 이승만 우익반동세력은 충실히 미제국주의의 용병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고수할 발판을 닦을 뿐이었고, 이는 미제국주의의 전후 세계체제의 재편성 전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48년 4월 제주도 민중해방투쟁에 대한 미제국의 전략적 전술적 대응, 즉 전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중의 변혁 의지를 철저히 분쇄하는 식민지화 반혁명전략을 수립, 그 지역에 미국의 자기이익을 대변해주는 친미반소정권의 수립, 예컨대 발칸반도에서의 그리스 내전에의 미국개입의 사례와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저항도 전략을 분석해 본다면 아시아에서의 최초의 지배실험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4·3봉기는 오히려 미제국주의가 먼저 민중을 유도하여 민중이 일어나면 되받아치는 작전으로서 계획적이요 의도적인 하나의 민중공격작전이었다. 이 민중공격작전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 제주도 4·3민중봉기인 것이지, 제주도 민중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빨갱이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었

다. 미점령군의 빨갱이몰이 작전과 그 작전의 행동대원이 된 이승만집단과 극우세력의 용병적 만행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미국은 194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전략에 있어서 공산주의자 숙청(Red Purge) 작업을 미국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일본 그리고 여러 지배점령 지역에서 실시해 왔다. 이러한 공산주의자 숙청은 지역적으로는 반공기지화, 정치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 장악, 인적으로는 모든 반동 보수세력의 영합,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블록(Block)을 구축하기 위한 저강도, 고강도 전략(Low and Higt Intersity War)의 일환인 것이다. 고강도 전략은 베트남에서, 저강도 전략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행됐으며 지금도 미국은 그 전략을 세계 도처에서 자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1948년 4월 3일 이날은 바로 미국의 저강도, 고강도 전략의 시험을 위한 작전개시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처음으로 제주도에 1948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제국주의적 지배전략을 구체화했던 것이다. 미국은, 자기는 뒤에 서고 같은 얼굴을 한 자를 대리용병으로 하여 대리전쟁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같은 민족 그 자체를 자멸하게 하고 보수 지배세력을 영합하여 약소민족인 조선을 종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를 빨갱이에 대한 공격과 소탕을 위한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선택했으며, 초토화작전과 공포의 충격작전으로 한반도의 민중해방세력을 근절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제주 4·3민중항쟁은 이나라 민중의 절실하고 처절한 자기 해방의 염원을 미제국주의가 전후세계체제의 재편전략에 의해 철저히 압살한 하나의 전형이었으며,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세계전략이 지금도 변함없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제주 4·3민중항쟁의 의의를 새롭고 정확히 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몸서리쳐지는 미제국주의의 “피의 전략”을 우리는 너무도 안이하게 생각해 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하고, 또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4·3항쟁의 한많은 10만 넋들이 이제 우리의 그릇된 한국현대사의 인식을 교정해주는 교사가 되어 우리 모두를 질타할 때 4·3의 진정한 의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힘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은 풀과도 같은 것이다. 밟아도 베어도 잘라도 찢어도 쏘아도 오히려 땅속 아래서 아래서 엉키며 부들켜 안으며 아침해와 더불어 슬며시 일어서서 드디어 푸르름을 지니며 꽃을 피우고 열매맺는 생동하는 존재이다. 이제 제주도 민중은 40여년의 어둠과 짓밟힘을 헤치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아침의 해를 마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주도 민중은 일어서고 있다. 슬며시 슬며시. 바로 지금, 상처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를 역사의 정방향에 세우고 주체자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4·3에 물든 피를 씻어내며 희생당한 이웃들의 무덤을 다듬으며 맺힌 원한을 풀고 양민을 학살한 모든 세력들을 낱알이 고발하고 아직은 상하좌우에 진쳐있는 예리한 칼벽을 넘어 해방의 새날을 예비하고 있다.

II. 실천과제

제주도 민중에게는 해방의 새날을 기꺼이 마중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의 현재적 복원, 즉 사실 확인을 위시하여 앞으로 밝혀지고 해명되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내용과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① 약소민족인 우리민족과 강대제국인 미국과의 사이에 있어서 왜 미점령군은 이 땅 위에서 제주도 양민을 10만이나 살해했는가. 그것도 같은 민족인 이승만 세력에 의해서, 또한 같은 땅에 사는 이웃들의 손으로 같은 이웃들의 생명을 살해하게 했는가. 그 저의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자행된 미국의 침략성이 역사 앞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된 미국의 침략성이 역사 앞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② 미국은 살해의 도구로서 일제에 영합했던 주구들(지주, 경찰, 군, 관료, 우익테러단 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살해의 도구인 일제주구들의 정체와 그 계보 또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현재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③ 미국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제주도를 선택한 저의는 무엇이었는가, 일본제국이 이용한 바닥을 그대로 계속 이용했다면 일제의 지배구조에서 미국의 지배구조로 이름만이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미국은 진정한 우리들의 해방군이 아니지 않는가?

④ 왜 미국과 영합세력인 이승만등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땅(Red Land)으로 규정했는가, 붉은 땅으로 규정하게 된 그 저의가 무엇이었던 가가 밝혀져야 한다.

⑤ 게다가 제주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다. 말씨가 본토와 다르다, 중앙정부로부터 유리되어 있었으니 배타적이요 분리주의적·폐쇄적이다’라는 지금까지의 해석의 근거를 재조명해야 한다. 제주도의 특수성은 제주도 민중의 입장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중앙이나 본토의 입장에서, 관에서 나온 자료나 덜된 어용학자들의 어림짐작으로 갈겨넣은 몇줄의 글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일제나 미국의 입장에서 제주도 민중의 특수성을 규격화해서도 아니된다. 이러한 제주도 민중의 특수성은 부정적 시점에서 정의 각색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민중의 특수성은 오히려 반봉건투쟁과 중앙지배에 대한 항거와 같은 민중해방의 에너지가 되었던 여·몽 연합군의 점령기에서부터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의 강점 지배기와 미군점령기에서 외세 제국주의에 대항한 제주도 민중의 특수성을 변혁의 힘으로, 해방과 자주의 역량으로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⑥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난 후 일제의 학정 밑에서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도민들이 대거 들어와서 인구는 갑자기 15만에서 약 26만(30만?)으로 증가했다. 그들 중에는 일본에서 급진주의 사상을 배워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로당과 접촉시키면서 4·3민중봉기를 매도하려는 시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설령 4·3민중봉기를 주도했다 치더라도 민중이 그 주도세력을 떠받치는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봉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봉기 불가능성이나 주도세력 부정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봉기를 가능하게 한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봉기의 주체는 제주도 민중이었기 때문에 주체자의 봉기와 그 성격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당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빼앗김을 거부할 것인가’는 제주도 민중의 선택이 4·3무장봉기로까지 전개되었던 것을 극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해외에서 들어온 진보적 지식인과 남로당이 제주도 민중을 충동질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등식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사관에 있어서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세력은 민중해방사에 궁극적으로 합류(合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⑦ 또한 제주도 민중해방투쟁을 제주도 4·3폭동 아니면 반란 등으로 표현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겠다. 제주도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어떠한 세력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제주도 민중봉기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세력은 물론 이승만집단에 영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즉 극우지식인, 서북청년단, 극우정치인, 미국의 보수극우세력들이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제주도 민중봉기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40여년동안 현재까지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화 통일을 거역하는 무리들이다. 이러한 무리들이 이 땅의 전후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제주도 민중의 자기해방투쟁에 대해서 폭동이다 반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민중의 폭동과 반란은 결코 폭동도 반란도 아니다. 오히려 먼저 제기되어야 할 것은 제주도 민중의 봉기가 아니라, 봉기를 낳게 한 반동세력의 만행과 탄압과 제국에 영합한 제국성이요 침략성인 것이다. 바로 이 반동세력의 만행이 봉기를 낳게 했다는 점을 상세히 규명해 나가야 한다. 즉, 봉기 전단계에 있어서의 제주도 민중에 대한 구체적인 반동자와 반동행위를 종합적으로 파헤쳐내야 할 것이다.

⑧ 1948년 4월 3일 민중봉기의 거사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1948년 4월 3일 전에 미점령군과 이승만 우익집단이 여러 면에서 ‘선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전에는 제주도 민중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봉기하자’해서 봉화를 올리고 새벽 2시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식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 제주도 민중의 봉기는 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4월 3일에도 계속되었고 그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4월 3일은 어떻게 보면 미점령군과 이승만 집단의 용병들이 제주도 민중에 대한 공격개시일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해방투쟁은 계속되는 매일이지 끊어진 어느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중해방투쟁은 연속적 자기 승화이지 단전될 어떠한 특수한 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 민중은 4월 3일 (1948)전에도 반미(反美), 반경(反警), 반서(反西), 반단선(反單選), 반단정(反單政)을 주장해 왔고 4월 3일 이후에도, 어쩌면 지금도 그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해방은 영구해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승

만 집단에 의해서 규정·왜곡·불온시 되어 온 4·3 민중항쟁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⑨ 또한 대체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지식인들까지도, “1958년 4월 3일 이전까지는 미점령군이 제주도 민중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 아니었던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호의적이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호의적이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도에 대해서만은 아니라 전후 (1945.8.15)에 있어서 미국은 직접군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동족끼리 싸우게 하라”는 전략, 즉 일종의 저강도 전략(Low-Intensity War)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지배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것이지 결코 우호적이었던 것이 아니다. 미점령군은 조선반도에서 적어도 1947년까지는 “동족끼리 싸우게 하라”는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1947년이 되면 미국의 지배 영역내에서 (특히 일본, 한국의 38°선 이남지역) 공산주의자 숙청(Red Purge)이 시작된다. 바로 제주도에서의 1947년 3월 1일이 Red Purge 시작의 신호일인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자 숙청은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에서 1948년 4월 3일로 이어지며, 오히려 제주도 민중은 극심한 공산주의 숙청정책 (선제공격)에 정당방위적 4·3봉기로 대응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대한 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에만 1948년 4월 3일까지 미점령군이 제주도 민중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다는 허구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단적인 예로서, 1947년 3월 1일 제주도 민중이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그런데 미군정과 경찰은 기념행진을 불법시켰으며, 경찰이 발포하였고 심지어는 어린애까지 말발굽에 밟히게 했으며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미점령군과 경찰이 3·1절 기념행사와 그 기념행진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민중은 마땅히 일제의 만행을 규탄해야 하며 1919년 일제경찰과 헌병에 의해서 살해된 희생자의 넋을 달래야 한다. 그리고 미점령군이 우리의 우방이요 해방군이라면 반드시 함께 참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발포하여 사람을 죽이고 부상까지 입혔는가. 여기에서도 「발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아니된다. 「발포」는 적에 대한 발포였음을 주시해야 한다. 미점령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원수’요 침략자였음을 ‘발포’의 총소리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제주도 민중을 향하여 발포한 바로 그 미점령군은 이 땅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40년간이나 지배(미주둔군을 비롯해서 작전명령권 장악)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점령군의 발포명령과 총소리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 봐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언제까지는 우호적이었다가 언제부터 비우호적으로 되었다는 식의 역사해석은 문제의 소재를 제주도 민중에게 돌리려는 술책이요 자기기만이다.

⑩ 또 한 가지 규명해야 할 것은 민중봉기의 주체의 문제이다. 제주도 인민위원회에 대해서도 단순히 남로당과 연결시키려는 시각이나 발상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는 「인민」이란 말조차도 좌익성으로 매김질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인민」이란 용어는 그저 평범한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 등의 대명사였다. 따라서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읍·면·리 단위까지 구성되었으며 자치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좌익(남로당) 세력의 역할은 오히려 제주도 민중의 요구에 합류한 것이며 제주도 민중의 필요에 응한

선봉적 역할의 일면으로 봐야 한다. 1948년 6월 15일자 당시 경찰총장 이인은 “제주도 사태가 이렇게 까지 악화된 것은 시정방침에 신축성이 없었다는 것과 관공리가 부패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예를 들면 고름이 단단히 든 것을 좌익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 할 것이다”라고 남로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주도 민중의 자기방위행위 또는 생존권 사수 투쟁에 좌익세력이 합류(合流)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좌익적 이념에 제주도 민중이 편향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 민중은 미점령군과 경찰, 서북청년단과 우익집단, 지배관료와 지주·자본가들의 극악한 탄압에 대한 저항적 자기방어 또는 해방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제주도 민중은 좌익사상이 제주도에 있기 이전에도 그러한 자기해방 싸움을 전개해왔으며 좌익사상이 들어왔을 때에도, 또한 좌익사상이 거의 뿌리 뽑혔을 때에도 제주도 민중은 자기방어와 자기해방을 위하여 힘겨운 일을 했으며 끈질긴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바로 인민위원회의 성격은 제주도 민중의 자치적·방어적 해방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의 자치조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① 남로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조명되어야 한다. 제주도 민중은 바로 자기방어·자기해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사상과 종교 그리고 이념을 수용해서 잘 쓸 줄 아는 슬기로운 민초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민중의 지혜이다. 이러한 지혜스러운 자기해방 투쟁에 좌익(남로당) 세력을 부각시키는 것은 미점령군과 이승만 집단에 공격의 표적을 알게 모르게 제시해 준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희생은 극대화되었고 소위 남로당은 그 희생을 막을 이념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Red Island)으로 몰들이는 도표적 역할만 해주고 만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중은 역사의 구체요, 생동하는 실체요, 일하는 생산자요,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와 살림, 문화의 토대요, 그 기반이기 때문에 민중은 자기해방의 논리와 구조를 가지며 희망에 찬 꿈, 아름다운 이상 즉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자기이념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념이 역사의 주체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남로당이 제주도 민중해방을 위한 선봉적 역할이 되고 민중에 합류하여 민중의 에너지를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 미점령군 이승만집단이 제주도 민중을 직접 살해하는 데 구실을 제공해 준 점에 대해서는 준엄함 비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제주도에서의 남로당의 족적을 통해서 이념은 적과 민중 사이에서 해방의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III. 복원작업

이와 같은 제반 과제가 어느 정도 재조명되면 현재는 사는 우리들은 역사를 바르게 복원하기 위해서 첫째로 제주도 양민의 희생을 자세히 밝혀내야 한다. 희생당한 자들의 이를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살해의 역사에 가담했던 미점령군, 이승만집단, 극우집단인 서북청년단 등은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반성과 바른 역사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그들은 위한 위령제와 위령탑이 한라산 중턱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하여 결코 다시는 지배세력에 의해서 양민학살이 자행되지 않는 역사적 교훈이 되도록 법률적 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

둘째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점령화의 만행과 양민학살의 책임을 묻고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복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셋째로 1948년 4월 3일 전후에 자행되었던 양민학살의 터(장소)를 조사하고 초토화작전에 의해 소개과정에서 초토화된 마을, 돌성 등 아직도 남아있는 희생의 산 증거를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유적지화 또는 박물관을 세워야 한다. 넷째로 후대에는 그러한 만행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에 제주도 4·3민중봉기를 자세하게 기록·기술하여 바른 역사의 교육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의 일로서, 국정의 일환으로서 당시·체험자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이야기를 글이나 이야기로 널리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그 당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자들로서 지금도 살아있는 유가족들은 유가족회를 결성·조직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풀지 못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40여년 동안이나 가슴에 맺혀 있는 한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한풀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와 과제 그리고 복원작업이 이루어지면서 4·3제주도 민중봉기는 제주도 민중해방투쟁으로서의 성격과 특성이 역사 위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IV. 이 책에 관하여

제주민중항쟁은 해방 후 최대의 항쟁이요, 가장 처절한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게다가 이데올로기적 억압과 편향을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녹두서평」에 ‘한라산’이라는 시가 발표되어 오랫동안 망각을 강요당해 온 제주민중항쟁에 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나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나아가 한국현대사의 분기점인 제주민중항쟁의 실체를 밝히는데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살아있는 많은 관련자들의 체험담, 묻혀있는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는 일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작업의 디딤돌로서, 이 책에서는 그 실상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정리했다.

김점근의 「한국전략과 노동당전략」은 4·3봉기를 남로당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바라보는 우파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육지인, 특히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경원시하는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과 미군정과의 갈등관계를 남로당이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는 4·3항쟁을 미제와 우익진영에 대한 남조선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책은 소련·북한·남로당과 제주도의 현실을 연결시켜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제국주의, 이승만정권, ·군경·민간단체와, 좌익 및 인민과의 투쟁, 탄압, 학살 등 당시의 역동적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사」와 「공비연혁」은 지배권력의 입장에서 봉기를 진압하는 군경토벌대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글로서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으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대립적인 시각이 맞닥뜨려질 때 그 실체는 보다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존 메릴의 「제주도 반란」은 미국학계에서의 제주항쟁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으로서, 이미 낡은 자료이기는 하나 미국인의 시각을 어느정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일지와 각종색인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려 했으나 워낙 불모의 상태에서 시작된 작업인 데다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을 갖고 있다. 1945년 이후의 국내신문, 관변자료, 잡지, 단행본, 청문, 국내외 학자의 글 등을 기본으로 해서 1945년 8월부터 1957년 4월 마지막 게릴라인 오원권이 생포되었다고 발표된 날까지 다루었으며 특히 1948년 4월 항쟁을 중심으로 엮었다. 용어는 가능한 한 자료에 있는 대로 정리했으며, 그 출처는 문헌색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자료는 관변자료에 치우친 까닭에 정확하지 못한 점도 있

다. 자료의 연대미상, 사건의 연대미상의 사항등은 그대로 실었다. 이러한 점은 현대사 연구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보완되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한울산 사람들-해방을 위하여!

사람을 키우는 일이, 바로, 4·3민족, 민중해방의 길을 드넓히는 그 길입니다.

한울산, 이 땅위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대의 꿈은, 희망은, 바람(바람)은...
이제, 여기에서...

남에게-힘센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겨
거지 없는-가난한 사람도 없는
빼앗는 도둑놈들도 없는 부자도 없는
사나운 짐승도 없는
대문도(막는다, 거들먹거린다, 높은체...)없는

겨레,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 노마-마노로 하나.

*다른 일보다, 앞서, 먼저... 헤아려보자

- 깨어나라를 되세기며
- 깨어나다(깨다+나다)의 얼, 뜻, 넓은

너 있는 곳 거기에 2*

너 있는 곳 거기에
길잡이 가르침이 있는가...
길 잃은 젊은이들에게

지푸라기 한올 건네준 일 있는가...
물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는
어린것들을 위한

너 있는 곳 거기에
길가 빈터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밤마다
오갈 곳 없는 이웃들에게
거친 잠자리라 하오나
손바닥 만큼의 빈자리를 선뜻
내어준 일 있는가...

너 있는 곳 거기에
보란 듯이 피어나서 좋은
제자리 씨앗 남겨둔 일 있는가
터박이 씨앗 한 톨이라도

자유한 오솔길 열려 있는가
산들바람 골바람 불어오는 그 길목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 있는가
그리운 사람 있는가
목숨 걸어서 좋은 그 한사람

너 있는 곳 거기에
넘어진 이웃 먼저 일으켜 세워줄
작은, 작은 종교가 있는가
따스 말 한마디 사투리가 있는가
동포를 적으로 겨냥하지 않아서 좋은
비무장평화의 땅

한치의 조국 땅이 있는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구름비에서 봉아름까지
어디에 한 톨 벽찬 애국이 있는가...
어디에 해맑은 모래판에서 모살밭까지
아, 홀로인 범섬에서
아, 홀로인 나진까지

너 있는 곳 거기에
하늘 떠도는 4·3의 아린 녀들
고요롭게 잠들어서 좋은
당당한 땅 남겨둔 일 있는가

4·3은, 오늘도, 4·3은
해방을 달구고 있다하네
평화를 버리고 있다하네...

* 4·3과 평화 제27호에 수록(2017)

*** 한울살 사람들**
-제자리를 찾아서

사람의 자리
그 제자리를 찾아야하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뱃속, 그 자리에서부터

사람의 자리
그 자리를 잃었는가

한울산 사람들
한울이 제자리인 것을
잊어버렸는가...

*** 한울산-자치도의 자립성**

- 오순도순-이웃사촌-사촌정신으로
- 수눌음(두레), 주냥(아깍), 제자리 제땅을 지킨다
- 세가지 없는-거지없는 세상, 도둑없는 세상, 맹수(대문)없는 세상
- 세가지 넘치는-돌많은, 바람많은, 여자많은
- 세가지 목숨-하늘목숨, 땅목숨, 모든목숨

*** 사투리를 지켜야한다** - 아사달의 성지 회복

*** 가해자는 누구였는가?**

- 피해자는 면책일뿐 역사진실을 되찾아야...
- 점령제국 U.S.A군, 정보원, 기업자 등
- 종교, 예술인
- 경찰, 군인, 서북청년단 및 반공주의자들

*** 제국-U.S.A연구심화 필요**

· 점령은 침략이니, 침략행위의 대한 불의를 파헤쳐야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아사달 남쪽에 쳐들어 왔는지, 우리말 우리글을 못 쓰게 했는지, 점령기 공식 언어를 영어로 쓰도록 강제 했는지, 모든 정령 규율은 어마어마한 침략행위 였으니

*** 겨레, 하나됨을 위하여!**

- 제국-U.S.A 물러났나요?
- 제국-U.S.A는 우리겨레에 절대 간섭말라는 것이지요. 제국-U.S.A군대는 평택기지, 해군기지, 핵미사일기지 철수 하라는 것이지요.
- 양과자 먹지말라-먹지 말아야 하지요. 양과자는 우리겨레를 좀먹는 독약이라고 했지요. 양담배 U.S.A상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것이지요. 그리해야지요.
- 제국-U.S.A의 주구를 타도 하자는 것이지요.
- 제국-U.S.A군사(점령)기관 조직에 빌붙어 아침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 제국-U.S.A노예를 배격하자는 것이지요.

*** 겨레, 하나됨을 위하여!**

- 노마-마노 하나됨을 위한 적극적 교육, 훈련, 교류 필요.
- 겨레(민족, 민중) 하나됨을 위하여
- 온갖 착취, 탄압, 지배의 사슬, 굴레를 벗어던지자는 것이지요.
- 우리는 이제 거지도 없고 도둑도 없으며 대문도 없이 오순도순 살아서 좋은 나라를 모든 일에 주냥정신으로 수눌음-두레정신으로 아깍과 나눔정신을 이어나가면서 평화로운 일, 뜻, 녀으로 자손만대에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풍요한 넉넉함으로 살아가자는...
- 따뜻한 혁명의 길을 닦아나가자는 것이지요.

*** 추곡강제 징수 즉각 중단하라**

- 3·1자주독립정신으로 통일된 나라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 학원자치는 물론, 역사외국 교육, 국가권력기관, 민간인을 간섭하는 일,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 친일파, 친제국U.S.A파를 처단하자는 것이지요. 국정원이니, U.S.직원이니 이제 그만 하자는 것이지요.

- 부패-씩어빠진 판사, 검사, 교수, 국회의원, 자본(재벌가)가, 경찰, 영터리종교가들 몰아내자는 것이지요.
- 무장경찰관, 군인 즉시 해산, 패지하자는 것이지요.
- 테러(서북청년단)행위자 집단 해체, 처벌하라는 것이지요. 통일정부 수립, 나라팔아먹는 단선, 단정 등 부당 조작하는 그릇된 정치모략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 국제, 국가폭력 비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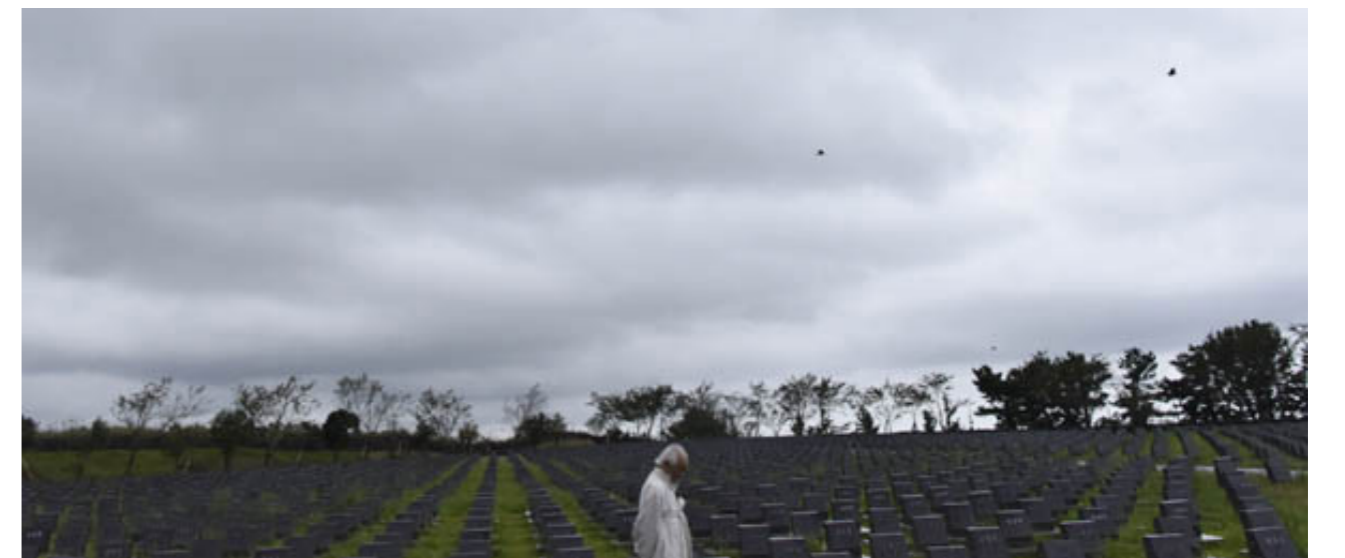
*** 모든 법률 앞에서**

- 법률집행자들이 먼저 법률을 학습
- 일반학생 및 어른들 학습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포커스]제주 4·3 진실 알린 게 죄인가

<제주민중항쟁> 펴내 옥살이 한 김명식씨, 31년 만에 재심 청구한 ‘그’의 이야기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갔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 <제주민중항쟁>을 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시인 김명식씨(76) 이야기다. 4월 1일 김씨는 31년 전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 4·3 사건 때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형인들과 행방불명된 사람들에게 법원이 최근 잇따라 재심 무죄를 선고하고, 희생자 배·보상과 특별재심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김씨의 재심 청구는 또 한 번의 제주 4·3 진실찾기다. 그를 3월 14일 강원도 화천군 집에서 만났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포함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참사다. 냉전과 남북 분단의 한반도 역사 속에서 제주 4·3 사건에 덧씌워진 이념적 시선 때문에 이 사건은 수십년간 제대로 정의조차 되지 못했다. 독재정권 하에서 제주 4·3 사건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지령에 의해 제주도와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돼왔다. 군경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은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로 여겨졌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제주 4·3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아

김씨가 <제주민중항쟁>을 쓰게 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다름없었다. 1945년 북제주군 애월면

하귀리에서 태어난 그는 제주 4·3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했다. “다섯 살인가, 여섯 살 때 어머니랑 피난을 갔어요. 산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가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동네 사람들과 잔솔밭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막 울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저 아이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아이 입을 막아 죽여야 합니까? 어머니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결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려가자.’ 어머니가 동생을 안고, 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반드시 죽는 거죠. 산에 갔고, 하산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나는 겁이 나지 않았는데 어머니 치맛자락이 내 얼굴을 짝 스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건 밥을 짓는 거였어요. 새끼를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고, 밤에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4·3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귀울음’이라고 하지요. 지금도 귓병으로 남아 있어요.” 돼지가 목덜미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장면, 총소리 뒤로 어떤 사람이 돌담을 넘어 도망치던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귀엔 자꾸 ‘살려달라’는 소리가 맴돌았다.

‘4·3이란 무엇인가’, ‘왜 제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김씨를 계속 따라다녔다. 정작 아무도 4·3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시와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 죽지 않았다, 여기 살아 있다’고 외치는 생존 신고의 하나였지만, 쉽게 쓰여지지는 않았다.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며 수사신부 수업을 받던 1976년 김씨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다. 1983년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어를 독학하면서 제주 4·3 사건 이후 일본으로 간 제주도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소설 <화산도>를 쓴 김석범씨도 그때 만났다. 제주 4·3과 관련된 일본 자료와 미군정의 정보보고서인 이른바 ‘G-2 보고서’ 등 미국 자료를 긁어모으고 분석했다. 제주 4·3 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항쟁이라는 데 생각이 모였다. 김씨의 생각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난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로 확장됐다. 생명과 평화, 아픔 없는 세상이 그의 화두가 됐다.



시인 김명식씨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를 둘러보고 있다.
시인 김명식씨의 아들 김일목씨 촬영·제공

일본에서 돌아와 ‘아라리 연구원’ 설립

1987년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아라리 연구원’을 설립했다. 아라리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준말이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오순도순 평화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고, 인종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담긴 이름이다. 이 아라리 연구원에서 이듬해 <제주민중항쟁>을 발간했다.

<제주민중항쟁>은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 4·3 사건의 현대사적 의의와 좌파·우파·극우파의 시각을 소개하고, 각종 자료를 취합한 내용이다. 대학생들이 이 책을 돌려봤다. 제주 4·3을 다룬 현기영씨의 소설 <순이 삼촌>과 이산하씨의 시 <한라산>도 주목을 받으며 제주 4·3을 제대로 알자는 목소리가 공론장에 나왔다.

“나는 책의 (목적)을 서문에 분명히 밝혔어요. 제주 4·3의 진상과 원인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물건이니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백일하에 자료를 발표하자고요. (...) 누군가는 3만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8만 내지 10만명이 죽었다고 썼어요. 호적상 3만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적이 없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념적으로 빨갱이라고 해서 3만명을 죽였다고 합시다. (구체적으로) 왜 죽였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군인도, 미국도요. 결국 4·3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태평양을 점령하려던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만만한 게 제주도였던 것이죠.”

책을 낸 지 3년이 지난 1990년 7월, 치안본부가 아라리 연구원에 들이닥쳤다. 김씨와 출판 관계자들을 연행했다. 노태우 정권이 정치인과 종교계 인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던 와중이었다. 수사기관은 김씨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연결된 반국가적인 조직인 간첩단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다. 김씨에게 국제간첩단 활동을 했는지, 배후가 누군지 등을 추궁했다.

김씨 측은 당시 영장 없이 체포·연행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강제연행된 후 잠을 자지 못하도록 여러 수사관이 돌아가며 24시간 신문했고, “너, 완전 간첩이지? 새빨간 빨갱이구먼” 식으로 김씨를 닦달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김씨를 변호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조총련과 연결된 반국가적인 조직으로서 국제간첩단 활동 내용에 대해 김씨에게 밤낮없이 반복해서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노태우 정부의 공안 당국은 김씨에 대해 국제간첩단 혐의를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김씨를 강제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결국 검찰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4·3 사건은 미국 공격에 항거해 일어난 봉기이고, 제주도 민중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빨갱이가 된 사건이 아니다”는 책 내용과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를 인용한 것을 문제삼아 <제주민중항쟁>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의) 인용은 학술 방법론에 따른 것일 뿐이고, 학문의 자유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도 아니었다”고 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는 기각됐다. 평화의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을 보자는 게 그의 주장이었지만, 국가는 이념의 잣대로 평가했다. 검찰과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한 <제주민중항쟁>은 현재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정말 이적표현물이 맞을까, 이적표현물이란 무엇일까.

<제주민중항쟁>은 이적표현물일까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2년, 김씨가 감옥에 간 때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끝에 제주 4·3 사건 때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대거 희생당했다고 결론냈다. 미군 보고서엔 ‘중산간지대의 모든 주민이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다”며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여전히 제주 4·3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씨는 제주 4·3 사건은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에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계속 되짚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알던 할머니가 턱이 없어요. 총을 맞아서요. 4·3이 빨갱이 때문이든, 뭐든 다른 것 없습니다. 턱을 고쳐내라, 이거예요. 첨단기술이 플라스틱으로 턱도 만들고 이빨도 만들지만, 그분은 턱이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죠. ‘빨갱이 사냥’을 한 것이라고요. 정치는 안 했습니까? 종교는요? 재벌은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요? 이름만 노동자지 노예입니다. 농촌 사람들은 갈 데도, 올 데도 없어요. 이건 전쟁이죠. 이젠 총 쏘는 전쟁 안 합니다. 무슨 놈의 이념,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정치가한테 속고, 권력가에게 속고, 자본주의라는 돈과 자본에 속고 있어요. (...) 우리는 4·3을 살아야 한다고 봐요.” 재심은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 시작될 수 있다. 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한다.

<화천 | 이해리 모바일팀 기자 lhr@kyunghyang.com>

4·3의 내일을 말하다

2부

4·3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4·3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양 동 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과제를 중심으로

양 성 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

1. 의의

- 제주4·3의 기간을 3·1발포사건으로 확장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적 영역에서 4·3폭동으로 불리던 사건을 제주4·3사건이라는 용어로 전환
- 폭도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을 제주4·3희생자로 인정
- 이 법을 통해 국가에서 진상보고서가 발간됨

2. 한계

- 제주4·3에 대한 성격 규명을 미룸, 정명의 미완성
-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
- 국가폭력에 의한 대다수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면서 책임자 처벌조항 없음
- 배제된 희생자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
- 제주4·3특별법에서 정해진 4·3기간 이후에 4·3으로 인한 피해 및 연좌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없음

○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제주4·3특별법

1. 의의

-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에 대한 최초의 피해회복 의 법률적 근간을 마련
- 군사재판의 일괄재심과 일반재판에 대한 특별재심의 근거를 마련
- 잘못된 호적의 정정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도록 함

2. 한계

-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위자료’라는 이름의 지급은 부당함
- 4·3에 대한 정의 부분은 개정이 되지 못함
- 국가폭력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처벌조항 개정은 시도조차 못함
- 4.19이후 4·3진상규명 활동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과 이후 4·3활동으로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희생자 인정이 빠짐
- 간첩조작 사건과 연좌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없음
- 여전히 배제된 희생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음

○ 전부 개정된 4·3특별법 6개월의 용역에 따른 요구

1.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급 적정 기준 마련

- 지난 기간 과거사 재판의 결과와 제주4·3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해야 하고 판결 시기이후의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함
- 희생자에 대한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상속 개시 시점

- 희생자에 대해 국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속의 개시 시점을 배상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반드시 규정해야 함
- 희생자가 사망하는 즉시 상속이 개시하는 것으로 하면 구 민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3. 형사보상청구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 재심재판을 통해 형사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위자료의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함.

4. 배상금의 지급 방식

-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함

5. 호적 정정에 따른 조치

- 잘못된 호적의 정정에 따라 국가배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부적 시행령의 마련 필요

○ 향후 4·3의 과제

1. 정명을 완성하기 위한 운동

- 80주년까지는 마무리되길 희망

2.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 연구자의 연구와 별개로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과 활동 필요
- 산발적인 활동 지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대가 중요

3. 국가폭력에 주도적 역할을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처벌과 단죄

- 이승만과 미군정 당시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전개
- 송요찬, 박진경 등에 대한 대응

4. 배제된 희생자 구제

- 헌법재판소 희생자 배제에 대한 내용 재심고려

5. 4·3특별법의 기간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 4·3의 기간의 범위 밖이라도 4·3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희생자 인정필요

6. 트라우마센터의 활용

- 4·3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회복 조치

7. 4·3에 대한 교육과 세대 전승

- 제주대학교에 4·3학과의 설치 및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 제주도교육청의 명예교사 활용은 좋은 사례

4·3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 동 현
제주민예총 정책위원장

4·3운동의 과제를 고민하면서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4·3진상규명운동의 지난한 노력은 새천년이 오기 전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고,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 의해 4·3위원회가 출범하여 희생자 신고·결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등으로 4·3은 일정 정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함으로써 4·3의 공식역사로 변화되었다. 이후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4·3평화공원·기념관, 재단이 설립되고 지속적인 명예회복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희생자로서 공식적인 신원과 진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배·보상, 불법 재판 무효화, 가해자 처벌, 구체적인 피해조사 등은 한계로 남아있었다.

이에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4·3 70주년 기념사업은 70주년을 4·3 해결의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4·3 추모와 기념사업을 추진해갔다. 4·3의 아픔을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배·보상 문제 공론화, 4·3수형인 문제 해결, 미국의 책임문제가 주요 해결과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4·3의 해결은 ‘국가추념’ 단계에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2단계 해결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3해결의 1단계가,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사과, 국가추념이라면 2단계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는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일정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2단계 피해회복은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일정 정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4·3진상규명운동에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운동’의 관점에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무척이나 고민되는 지점이다.

소위 과거사청산의 순차적 해결은 진상규명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가해자 처벌(사과), 기억공간(위령시설)과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수순으로 대체적으로 진행된다. 4·3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으로 진상규명과 이후 평화공원과 기념관 재단 설립, 국가기념일 지정 등으로 명예회복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제기할 때 항상 제기되는 정명(正名)의 문제, 미국의 책임 규명, 가해자 처벌, 구체적인 추가진상조사, 그리고 기억전승이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 중 기억전승의 부분은 후세대가 4·3을 알고 기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주제는 다음 세션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야만 피해자를 무마하지 않고 가해자를 청산하고 피해자 중심의 진정한 과거청산일까?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조금은 양보해야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했던 진상규명은 과연 피해자를 청산하는 과정일까?

물론 토론자도 가해자 처벌(청산)의 단계가 과거사청산의 하나의 모범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대의 과거청산작업의 모델이 모든 과거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4·3을 견뎌야 했던 피해자와 유족 분들은 많은 경우 한 마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묵묵히 공존하는 삶을 사셨다. 그 분들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을 진압체계상, 상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징적인 언술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가해자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 것인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명(正名)의 문제는 어렵다. 정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항쟁의 이름을 4·3의 뒷자리에 넣고 싶어한다. 60주년, 70주년 우리는 정명을 주장하면서, ‘항쟁’, ‘민중항쟁’을 호명했다. 물론 토론자인 나 또한 항쟁의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글을 썼다.

저항과 항쟁의 역사를 소중한 4·3의 자원으로 여전히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항쟁을 4·3의 뒤에 붙여야 하는가는 고민이다.

항쟁세력에 의해 평범한 소녀들이, 도민이 희생되었다고 해서 항쟁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항쟁이라고 해서 100%의 순수성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항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는 너무나 시대에 떨어진 느낌이다. 80년대의 민중항쟁이 아니라 21세기의 4·3을 호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운동을 붙이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정명의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이, 그리고 그속에서 4·3을 자꾸만 호명하는 것이 4·3이 박제화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난 서사는 피해자 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되는 피해 사실들은 오로지 가해자의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에 머물 수 있다. 이때, 폭력을 통해 피해자라는 위치에 강제적으로 놓이게 된 이들은 다시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된다. 이 ‘피해자의 피해자화’는 그들이 지녔을 다양한 가능성들을 봉인한다. ‘수난의 역사’만을 강조할 경우 결국 가해자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수난과 아픔의 역사, 그리고 저항과 항쟁의 역사! 그 속에서 “4·3 오늘의 당신 아들 딸들은 일어섰다”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한쪽에는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지지하는 평범한 제주도민이

있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후폭풍은 너무나 컸고, 폭풍의 세월을 건너고 견뎌야했던 금기의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서 4·3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혹은 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는, 더 많은 논쟁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다.

4·3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위원장

I 제주4·3진상규명 운동

1. 진상규명을 위한 초기 운동

1960년 국회에서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발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6월 6일에는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의 제주도의회에서 하루 동안 4·3사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6월 18일 국회에서는 양민학살 보고서가 국민불신의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되어 졌다. 1961년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회원 2명, 제주신보 전무, 제주도의회 의장이 구속되면서 진상규명운동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1986년 4월 3일 교내에 4·3분양소를 설치하였고, 1987년 3월 4·3의 진상과 아픔을 다룬 이산하 시인의 장편소설 “한라산”발간하고 1988년 4월 서울형사지법은 이산하 시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4·3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1988년 제주신문에서는 4·3취재반(반장 양조훈)이 운영되어 본격적으로 4·3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의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추모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4·3진상규명 촉구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989에는 지역언론에서 4·3 기획물 및 제주신문의 “4·3증언”이 57회 연재되기도 하였고, 제주4·3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발족되기도 하였다.

2. 제주4.3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1999년은 제주4.3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동안 도민 및 국민의 열망을 담아 4·3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이 결과가 제주4·3특별법 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99년 4월 제주도 시·군·읍·면·동사무소에 4·3 피해신고 접수창구 개설을 통해 4·3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4개시·군의회 및 유족회등 관련단체 80명으로 구성하여 전국 순례 홍보를 시작하여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4·3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였다. 이후 신산공원에서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드디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여야합의로 11개 조문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되어 제주4·3의 진실규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제주4·3은 19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법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희생자 및 생존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1월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해외 위령공원 조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만 2·28평화공원, 일본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국내지역은 부만 민주공원, 마산 3·15성역화 사업현장, 광주 5·18기념공원 등을 방문하여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2002년 1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 선정기준 등 4·3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2003년 3월 제주도의회에서는 제55주년 4·3사건 범도민위령제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였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과 한국언론포럼”이 개최되었다. 또한 3월 29일 4·3중앙위원회에서는 4·3진상조사 보고서 6개월 후 재심하는 조건부 심의 의결하고 대정부 7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4월 제주4·3 제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4·3위원회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진행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10월 4·3 중앙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4·3관련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 표명을 하였다.

2013년 8월 2일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화해와 상생을 선언하고 12월 공동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이 참여한 가운데 충혼묘지와 4·3평화공원을 함께 참배하는 대통합 추모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제 4·3은 제주의 아픈 역사 뿐만 아니라 화해와 상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및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두 번의 참석을 통해 4·3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유족회는 21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법률의 통과를 위해 야당 국회의원과 공동발의가 될 수 있게 해야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도의회는 전국의원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시도의장단 협의회를 포함한 13개시도의회 및 3개의 기초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해주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마침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월 26일 통과되었다.

II 특별법 통과 후 향후 과제

지난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5년간의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2월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3개월 후인 6월에 시행된다. 온 국민의 힘을 모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

괄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법률안 제16조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안전부는 후속조치로 4·3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의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8월까지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합의안을 토대로 용역이 시행중이지만 4·3유족들은 배·보상에 담긴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용역진행과정에서 유족과 많은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와 유족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6개월간의 용역기간 중 4·3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 개최, 도내·외 4·3유관기관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세대들의 4·3을 기억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청년세대 토론회도 개최된다. 청년들의 4·3을 기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에서는 유족회와 함께하는 4·3유적지 탐방, 4·3관련기관 협조로 이루어지는 다크투어리즘 유적지 탐방 등을 통하여 4·3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지역 대학, 각 연구기관, 의회가 함께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4·3을 통한 평화와 인권을 공유할 수 있는 4·3세계화 교육이 진행된다. 그리고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4·3세대 전승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4·3은 배·보상 및 명예회복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청년세대들의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고

송 시 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 1993년 봄에 광주지역의 시민사회와 5·18관련 단체들이 1박 2일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하여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정하였다. 5원칙은 1)진상규명 2)책임자 처벌 3)명예회복 4)배상 5)기념사업으로 정해졌다. 이 원칙은 이후 5월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었다. (오월교육원 칙과 교육활동 교원연수 자료집(2016)에서)

▷ 특별보고관은 대규모의 인권침해와 학대로 인해 과거에 발생한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라는 네 가지 요소들을 활용한다. 과거에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조직적이고 심각하게 침해된 인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의안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와 같은) 조치들이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바로 잡는데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2012년 제2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특별보고관 임무의 기반과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보고서에서)

▷ 희생자

-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에서의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17. 각하)

- 4·3특별법은 4·3의 담론을 항쟁의 역사를 소거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한정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해석의 기준이 되었고 그 이상의 것을 거론하는데 부담을 안겨 줬다.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을 호소해야 입법이 가능했던 지난 시기를 벗어나야 한다. 해방 공간을 갈라치기하거나 이념대립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워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희생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책임자 처벌

미 군정기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미 군정기에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1983년 ‘고마레즈’ 소송에서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인들을 강제수용소에 일방적으로 억류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미 정부는 일본인들을 집단수용한 것을 사과하고, 집단 수용되었던 일본인들에게 2만 달러 씩 총 12억 달러를 배상했다. ‘일본인 강제 구금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제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백하였듯이 미국은 건국 후 245년 동안 싸움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하다고 했다. 냉전의 희생양을 삼은 제주 섬에서 학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력자들이 반인권적인 일을 저지른 것과 그 책임자들을 가려내 역사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 없이 재발 방지와 화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역사 법정이 필요하다.

▷ 위자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장례비와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불법행위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 사건 가해행위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되었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는 ……원,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하여는 ……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 2, 3에 대하여는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나506 판결)

- 희생자를 위한 배·보상

개정안의 주요 핵심으로 재판(군사, 일반)의 불법성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한 가운데 희생자 배·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결정된 희생자 이외의 제주도민은 4·3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야 하는가? 공동체 파괴에 대한 마을 치유와 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 보다 집단 배·보상의 방법은 없는가?

▷ 4·3교과서는 왜 없는가?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3.4.10.)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4·3평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광주5·18은 사실 전달의 틀을 벗어나 민주, 인권, 평화, 나눔, 공동체 등 가치교육 방식으로 오월교육 원칙을 합의하고 시행하고 있다.

- 인권, 평화, 역사 토대, 현재성, 보편성의 원칙을 4·3교육 5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4·3평화·인권교

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2020. 11. 30.)

- 제주대 윤리교육과 강봉수 교수는 발생과정에서 민족, 민주, 자주, 통일, 전개과정에서 정체성, 평화, 인권, 공동체, 생태, 치유과정에서 화해, 상생, 정의, 정명의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제주교육청은 2016년부터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대과제(제도개선, 현장지원, 자료개발, 전국화와 세계화)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학교에서의 4·3교육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역사 부정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개정법 24조(기념사업 등)와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에 따라 세대전승과 교육을 전담할 교육재단 설립 필요하다. 평화재단의 경우 추가 진상조사와 기념사업의 역할 등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고, 교육재단은 제도권 내의 교육과정 연구와 지원을 통해 지역사 편재를 강제함은 물론 민간영역의 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개발과 교육자료 등을 전문적인 집단의 연구와 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 내고, 학교 내·외에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3의 내일을 말하다

3부

청년, 4·3의 미래를 말하다



토 론 문

박 건 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4.3 분야에 청년이 없다고들 한다. 사실 4.3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영역, 정당 정치 영역까지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이는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기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기에 기대해 본다.

우선 현재 4.3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는 희생자유족회와 8, 9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이후 시민운동에 참여해온 586세대 활동가와 그들이 속한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은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4.3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고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한 진상규명의 시작과 최근 특별법 개정 운동을 통한 배보상의 길을 여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70주년 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를 비롯한 제주도민사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세 가지를 뽑았다. 첫 번째가 ‘4.3특별법 개정’이었고, 두 번째가 ‘미국의 책임있는 사과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4.3의 이름을 정하는 증명’이었다. 이 중 첫 번째 과제인 특별법 개정은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올해 통과되었고, 나머지 미국 정부의 사과와 정명이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제는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유족과 활동가들에게 미국 의회의 한 직원이 “사과를 받으려면 최소 50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또한, 4.3의 이름을 정하는 증명도 ‘폭동’과 ‘항쟁’ 사이에서 쉬이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길은 4.3 운동의 재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이 과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주체 형성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해보인다.

그러나 현재 2030 청년세대는 4.3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소년기에 4.3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세대이다. 70주년에 다양한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통해 조금씩 알게되었지만 대다수의 청년이 4.3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청년들이 4.3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들 4.3 운동에 참여하려고 할까?라는 질문을 남겨두게 된다는 것이다.

“왜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지 못 하는가?”라는 질문

은 ‘청년’이라는 키워드의 유행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1948년 4.3 당시 무장봉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유격대 제1대 총사령관 김달삼은 1923년생으로 25살이었고, 제2대 사령관 이덕구는 1920년생으로 30살 남짓의 나이였다. 시간을 좀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청소년, 청년들은 사회 변화의 주역이었다. 시간을 미래로 돌려 독재정권에 맞서며 민주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주체 역시 청소년, 청년이었다. 4.19 혁명 당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김주열 열사는 마산고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나이였고, 6월 항쟁의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다. 현재 정치권, 시민사회 영역 등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586세대’ 또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청년기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려 20대, 30대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의 청년들이 그랬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 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를 품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모습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종종 인식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본 기성의 한국 사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로의 언어와 청년들이 ‘노오력’을 해야지라는 질책의 언어로 현시대 한국 사회 청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며, 보다 성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 현시대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가?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몸속 DNA에 공통적으로 나약함과 이기적임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일까? 정말 청년기는 원래 다 힘든 시기인데 지금의 청년세대만 유독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 4.3 영역과 더불어 사회영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그 처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했고, 시장의 자유 즉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기치로 내건 이 정책기조가 기업들에게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기조에서 사회복지 지출도 줄어들어서 청년들이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을 동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4.3 영역에서 청년 부족 문제는 누구를 탓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몇 십년간 4.3운동을 이끌어 왔던 선배들이 후배를 키우지 않았더라거나,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어서라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기존 4.3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2030 세대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청소년 위원회 서킷에 대한 고민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업에서도 ‘세대전승’을 위한 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고, ‘4.3 청소년 문화예술한마당’이라던지, ‘4.3 청년활동가 교류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4.3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활동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70주년을 준비할 때 미국의 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었는데 제주의 청년들도 서울, 광주, 부산을 돌며 전국 청년들의 서명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 4.3 유튜브 왜곡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례, 그리고 청년 공부모임을 꾸려서 함께 4.3을 공부하고 알리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아직 소수이다. 이렇듯 제주 4.3과 관련된 세대변화, 세대전승의 문제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4.3 영역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러한 인식 속에 기성세대 청년세대 서로를 탓하지 않고 4.3 운동의 재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함께 노력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씨앗들이 발아하고 곧 숲을 이뤄 4.3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 론 문

신 동 원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 시민참여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라는 단체에서 시민참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 단체는 주로 기행을 통해 제주4·3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3 유적지 기록과 4·3 생존자 및 유족 구술 채록, 4·3 관련 시민 교육, 국가폭력 반대를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단체에서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1년이 다 되어가는 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검찰과 경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재활동을 했습니다. 4·3도 저의 주요한 취재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마지막 4·3 취재는 지난 2019년 1월에 있었던 4·3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판결과 같은 해 6월에 있었던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재판 청구 건이었습니다. 2년 전에 취재했던 행불수형인 재심 재판 건이 올해 3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4·3 활동가로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감회가 무척 새로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0대 청년이자, 4·3과 지근거리에서 활동을 벌여온 직업인으로서 4·3과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속한 제주다크투어는 기행을 통해 4·3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기행을 통해 4·3에 대해 알아가십니다. 4·3을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기행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어땠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마침 지난 4월 2일과 3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내려온 2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행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4·3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날 기행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행이다 보니 나름 빠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행팀 측의 요청이 있었기도 했고, 우리 단체도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기행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피로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과연 저 청년들이 4·3에 대해 얼마나 알고 돌아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주4·3은 7년 7개월 동안에 걸쳐 전개된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단체명, 지명, 날짜, 숫자에 이르기까지 4·3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내용을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과연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리는 것은 알리는 것이고, 그 알려준 내용이 저 청년에게 얼마나 가닿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자기만족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4·3의 세대전승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4·3의 전국화, 세계화와 맞닿아 있는 물음입니다. 또 우리 제주다크투어가 기행을 통해 목적하는 4·3 알리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4·3 활동을

하면서 줄곧 고민해 왔던 화두이기도 합니다.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4·3 세대전승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3을 알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50대 이상에서는 직접 4·3을 경험한 분들의 증언을 통해 4·3을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20대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0대의 경우 학교 교육을 통해 4·3을 알게 된 비율이 76.6%에 달했습니다. 직접 겪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은 5.3%에 불과했습니다. 30대의 경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해 4·3을 알게 됐다든 사람(41.1%)이 직접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람(20.0%)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청년시절에 가족, 친지, 선배 등 4·3을 직접 겪은 윗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4·3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당시 자신이 처한 삶의 형태를 일정 부분 규정한 가족사 혹은 지역사로서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현재 청년세대는 공적 영역인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4·3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나열된 이 교과서에서 4·3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4·3이 앞선 세대처럼 현재 청년들에게 비중 있게 가 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적 영역에서의 역사교육은 4·3의 세대전승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을 직접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학교 교육을 통한 4·3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로 4·3을 배운 청년들에게 4·3이 그저 교과서 속 텍스트에 머물지, 아니면 내 가족 혹은 이웃이 겪었던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질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제주4·3과 청년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동안 제가 해온 4·3 관련 활동을 토대로 나름의 설익은 대답을 내놓을까 합니다. 제 경험 중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청년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심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과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주4·3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으로 기획했습니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나이대의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젊은 청년들의 참여 열기는 단연 뜨거웠습니다. 가장 나이가 적은 참가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
2020년 9월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인 제주4·3 재심(청구) 재판 시민방청단이 재판 시작 전 촬영한 기념사진.

지난해 11월에 동참했던 대전 골령골 학살터 유해발굴 현장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골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수형인 수천 명이 학살된 장소입니다. 제주4·3 당시 대전형무소에 왔다가 희생된 사람도 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조사단에 소속된 전문 발굴팀 외에도 고등학생들과 새내기 대학생, 현직 교사, 외국인 등 많은 청년들이 현장을 찾아 목장갑을 끼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촉박한 작업일정과 한정된 인력 속에서 청년들은 가뭇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청년들도 자신이 옮긴 흙 한 줌의 무게를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진 설명 :
2020년 11월 7일 대전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에서 발굴팀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이외에도 우리 단체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국제학교의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제주4·3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맙게도 학생들 쪽에서 먼저 제주4·3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알리고 싶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과 함께 4.3을 알려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제주4·3 유적지 답사 및 기록 활동, 4·3희생자 유족과의 만남 등 여러 활동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교과서로 4·3을 배운 세대가 4·3을 우리의 역사로, 나 자신의 역사로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4·3 활동가의 역할은 보다 많은 청년에게 이런 기회와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봅니다. 청년들이 그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추모하고 기억하는 활동들을 펼칠 때 4·3은 더욱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에 참여한 중학생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쓴 글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우리 주위엔 아직도 4·3에 대해 알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 듯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5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4.3평화공원에 방문하고 관심이 생겨 4.3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혼자 4.3평화공원에 가서 보고 했지만 아직 4.3사건을 다 알지 못하고 4.3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요. 중학생이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4.3사건에 대해 더 알고 배우고 싶습니다. 조용히 있을게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결석 처리 안되고 갈 수 있어요.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다녀서 버스도 잘 탑니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힘내세요 🙏

청년의 시선으로 본 4·3운동의 과제
4·3청년활동가의 위치 찾기

임 그 린

제주여민회 4·3과여성위원회 위원

4·3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4·3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를 4·3활동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하고 알리는”의 한계

우리는 민주화의 시대가 끝난 후 태어났다. 나에게 ‘국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다가온 것은, 스무 살에 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다. 세월호는 내 기억의 일부분이고, 언젠가 일상에서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4·3은 다르다. 나는 4·3을 겪지 않았고, 4·3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청년들은 4·3을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스스로의 개별적인 경험과는 동떨어진, 다만 내가 나고 자란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청년들은 지역이 요구한대로 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한다. 4·3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사라진 채 4·3을 ‘홍보하는 것’이다. 지금 4·3은 상품으로 우리 곁에 있다. 에코백, 컵홀더, बै지 등 다양한 상품이 제작되고 소비자는 그것을 구매함으로써 4·3을 일상에서 지니게 된다. 판매하는 청년 주체는 매번 새롭게 등장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라진다. 4·3프로젝트를 진행한 청년들은 4·3활동가로 성장하지 않는다.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광주에는 5·18항쟁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세대들이 5월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을 후원해주는 지원사업이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May fellow」 프로젝트는 5·18민중항쟁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민주, 정의, 평화, 인권’의 가치를 담은 활동이라면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활동방식을 정형화 하지 않고 청년들의 주체성과 개별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주로 문학공모전이나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4·3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 역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말한 4·3을 상품화하는 프로젝트들처럼 여기서 목소리를 낸 주체들은 이후의 활동을 지속할 장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4·3에 대한 담론을 확

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반경이 제한된다.

물론 청년을 4·3활동에 유입시키는 단체들도 있다. 제주여민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난 나는 운이 좋다. 내가 2019년에 제주다크투어에서 기획한 강좌를 수강한 것을 알고 있던 제주여민회는 2020년에 활동제안을 해주었다. 제주여민회 <4·3과 여성위원회>에서는 4·3을 겪은 여성어르신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활사와 개인사를 아카이브한다. 이론적으로 어렵듯이 알고 있던 4·3을 어르신들의 삶터에서 직접 듣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나는 4·3활동가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여민회라는 공동체를 떠났을 때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 나는 4·3을 4월에 이뤄지는 의례적인 행사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경험하고 연대하기”로의 전환

4·3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야 한다. 청년들은 4·3을 기억하고 알리는 거대 담론에 소환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경험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4·3과 연대할 수 있다. 청년들이 4·3의 의미와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청년이 4·3을 경험하고 연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4·3운동의 내일을 이야기할 때, 청년활동가의 위치 찾기 역시 논의되어야 함을 말하며 글을 마친다.

4.3은 그들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

-최근 3년간 언론 보도 경향과 과제

조수진 제주투데이 기자

2019년 4.3특별법 개정 촉구

2020년 총선 후보들의 4.3 공약

2021년 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의 과제
(정명, 미국 책임, 유해 발굴, 조작간첩 연루 피해자, 교육 등 다양한 이슈)

언론사: 지역 일간지(A)/인터넷신문(B)/방송(C)/중앙지(D) 각 1개사 총 4사

대상 기사: 4.3관련 총178건 (단순 행사 및 선거 후보 기사 일부 제외)

기간: 최근 3년간 매년 3월1일~4월2일

▶ 4.3특별법 개정 이전

-특별법 개정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집중.

-자칫 4.3이라는 입체적인 역사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단순화하는 문제.

▶ 4.3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다

- 희생자 또는 유가족 인터뷰의 경우 대부분 억울한 사연에 집중하는 경향.
- 인터뷰 대상자를 4.3의 '증인'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문제.
- 당시를 살았던 희생자들을 타자화하고 4.3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할 우려 존재.

▶ 4.3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 왜 우리는 4.3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질문을 던져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당시를 살았던 이들의 증언을 최대한 기록.
- 4.3관련 인터뷰 대상자 층을 확대할 필요.(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자 등)

■ 첨부자료

순번	날짜	언론사	제목
1	2019-04-01	A	해태동산에서 도령마루로...4.3 학살터 이름 되찾는다
2	2019-03-06	A	이해찬 대표 "4.3특별법 개정, 임시국회서 처리 노력"
3	2019-03-07	A	제주 국회의원 "4.3세계화 나선 제주청년들의 시도에 환영"
4	2019-03-10	A	"4.3특별법 개정 촉구" 민간 차원 움직임 본격화
5	2019-03-10	A	4.3특별법, 이달 25~26일 국회서 논의될 듯
6	2019-03-12	A	제주4.3찾아가는평화·인권교육,전국화큰역할
7	2019-03-13	A	道·도의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총력전
8	2019-03-13	A	4.3 지방공휴일 법적 근거 조례에 반영된다
9	2019-03-14	A	자유한국당,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10	2019-03-18	A	"해방기제주4.3은왜벌어졌나"
11	2019-03-19	A	4.3 등 공권력 만행 배상·재발방지 의무 국가에"
12	2019-03-20	A	유엔 특별보고관 "4.3 해결에 특별한 관심 갖고 지원"
13	2019-03-20	A	"4.3 정치적 유불리 떠나 인권문제, 법안처리 해달라"
14	2019-03-22	A	따로노는4.3특별법개정안...“단일안필요”
15	2019-03-24	A	4.3 등 과거사 재심 본격화...명예 회복 시급
16	2019-03-24	A	올해 4·3희생자추념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
17	2019-03-24	A	김부겸 장관 "4.3 배·보상 연금분할도 대안 가능"
18	2019-03-25	A	정부 "4.3 배·보상 불가피", 이젠 국회가 답할 때
19	2019-03-26	A	4·3희생자130명·유족4951명최종인정
20	2019-03-27	A	4.3희생자·유족 심사 속도...실무위 매달 2회
21	2019-03-27	A	"억울한간첩누명벗고뚝뚝해졌다"
22	2019-03-28	A	4·3특별법 4월1일 '운명 가른다'
23	2019-03-30	A	"눈 크게 뜨고 보라"며 母 총살...고문 후유증 여전
24	2019-04-01	A	4·3특별법 개정 행안위 법안소위 '불발'
25	2019-04-01	A	잊혀진 4·3학살터...도령마루를 위로하는 굿판
26	2019-04-01	A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4.3 역사 바로 세워야 "
27	2019-04-01	A	4·3특별법 15개월만에 첫 논의...배보상 여전히 '난제'
28	2019-04-02	A	국회, '4.3 배·보상' 대승적 접근 기대한다
29	2019-04-02	A	"4.3특별법 개정 최선...화해·상생의 길 동참"
30	2020-03-02	A	마잉주 전 대만 총통 4.3전시 관람...2.28과 유사점 관심
31	2020-03-02	A	코로나19 여파 4.3추념식 정상 개최 '초미의 관심'
32	2020-03-17	A	"잘못된 것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
33	2020-03-19	A	4.3추념식 3.1절 기념식 준해 축소 개최된다
34	2020-03-19	A	4.3생존희생자 두자릿수로 줄었다...4.3 해결 절박감
35	2020-03-26	A	4.3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완전 해결' 토대 마련 지연
36	2020-03-29	A	제72주년 4.3 추념식 앞두고 유족·희생자 7696명 추가 인정
37	2020-03-30	A	강창일 "통합당, 4월 임시국회 4.3특별법 반드시 통과 약속해야"
38	2020-03-31	A	통합당 이채익 "정부 반대로 4.3특별법 국회서 처리 안돼" 주장
39	2020-04-01	A	제72주년 4.3 추념식 중앙 정치권 '총집결'...제주 표심 흔드나

40	2020-04-02	A	제주에 봄이 오려면...정의로운 4.3 해결 이뤄져야
41	2020-04-02	A	(사)4·3범국민위 “여야 정쟁중단하고 20대 국회서 4·3특별법 처리하라”
42	2020-04-02	A	"한 맺힌 제주4·3, 청년들이 제대로 기억해 달라"
43	2020-04-02	A	4·3부터 주말까지 '초접전' 예고...4·15 총선 '대회전' 승부수
44	2021-03-01	A	4·3 기금 조성 공식화...“과거사 해결 모범되겠다”
45	2021-03-01	A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에 봄이 온다
46	2021-03-01	A	'4.3 완전 해결 발판' 특별법 개정...제주에 봄이 왔다
47	2021-03-02	A	“4·3배보상방안에유족·도민의사반영돼야”
48	2021-03-08	A	제주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위해 제주·전남 ‘맞손’
49	2021-03-08	A	4·3평화재단, 미얀마 군부 향해 “야만적 탄압 중단”
50	2021-03-09	A	4·3특별법개정과기금조성
51	2021-03-09	A	이낙연 "4.3특별법 전면 개정 등 오랜 숙원 해결 큰 보람"
52	2021-03-12	A	4·3희생자 암매장 추정 장소 7곳 유해 발굴 추진
53	2021-03-15	A	내일4·3수형인335명재심선고...‘명예회복’기대
54	2021-03-16	A	제주4.3피해보상-명예회복길열렸다
55	2021-03-16	A	제주4·3수형인335명명예회복...완전한해결진전
56	2021-03-16	A	문재인 대통령 4·3 73주년 추념식에 참석하나
57	2021-03-16	A	“아직 한라산에 봄 오지 않았다...재심 계속 추진”
58	2021-03-16	A	모진 고문 시달리다 수감된 생존 수형인도 모두 “무죄”
59	2021-03-16	A	“고향의 봄꽃 얼마나 보고 싶을까...이제라도 억울함 풀길”
60	2021-03-17	A	20분이면 풀릴 누명 70년 넘게 짊어지다니
61	2021-03-19	A	정세균 총리 “4·3특별법 개정, 정부의 당연한 의무”
62	2021-03-23	A	4.3실무위 희생자 3명·유족 124명 의결...중앙위 결정 요청
63	2021-03-24	A	‘남의 이름’ 할머니와 ‘여자 이름’ 손자의 ‘내 이름’ 찾기
64	2021-03-25	A	제주에 봄 왔지만...아직도 구천 떠도는 4·3 영령들
65	2021-03-25	A	4·3문화예술 다변화...제주부터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 지지까지
66	2021-03-28	A	유족 의견 반영 과제...과거사 청산 이정표 기대
67	2021-03-29	A	“미얀마는 지금 1948년의 제주4·3이다”
68	2021-03-29	A	‘백비’에 새길 4·3의 바른 이름 찾기 후속 과제
69	2021-03-29	A	4·3 광풍에 200여 호가 살던 마을 잃은 아픔 곳곳에 남아
70	2021-03-30	A	4·3 '유해 발굴-유적지 보전' 완전한 해결 밑거름
71	2021-03-31	A	제주4·3 행불인 추정 유해 발견...유족 숙원 해결 기대감 고조
72	2021-03-31	A	‘4·3기금’으로 비극의 과거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다
73	2021-03-31	A	“제주4·3 당시 가시리 움막서 일가족 몰살...과수원에 묻혔다”
74	2021-04-01	A	‘도피자 가족’ 몰려 식구 11명 총살...4·3 비극에 갇혀 산 73년
75	2021-04-01	A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슴 아픈 역사를 꼭 알릴거예요”
76	2021-04-02	A	김창룡 경찰청장 73주년 4·3추념식 참석 위해 제주 온다
77	2021-04-02	A	“슬픈역사를기록해서영원히기억할게요”

순번	날짜	언론사	제목
1	2019-03-04	B	제주4·3추념일에 재·보궐선거 선거 예정대로 진행
2	2019-03-07	B	제주 국회의원들 “美의회에 ‘4·3화해법’ 청원시도 환영”
3	2019-03-12	B	70년 전, 강제 추방된 제주인들 ‘불법체류자(illegals)’
4	2019-03-13	B	홍영표-나경원 "4·3특별법 챙기겠다" ...기대해도 될까?
5	2019-03-19	B	제주4·3 유족 8만명에게 '유족증' 발급...복지혜택 강화
6	2019-03-19	B	“제주4·3사건 미국이 사과하도록 UN이 적극 나서야”
7	2019-03-20	B	제주4·3특별법 6개월만 심사 재개...71주년 즈음 희소식 들릴까
8	2019-04-01	B	71주년제주4·3추념식,도올과유아인온다
9	2019-04-01	B	내 4·3예술은 실패, 후배들은 더 치열하고 더 부드럽게”
10	2019-04-01	B	“특별법 조속통과” 4·3사진전 개최로 여·야 우회압박
11	2019-04-01	B	여야 대표까지 4·3특별법 개정 약속했는데...또 불발
12	2019-04-02	B	바른미래당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전력 기울일 것"
13	2019-04-02	B	4·3생존수형인 피해자들, 70년만에 환영받은 제주땅
14	2019-04-02	B	정의당 제주 "4·3 완전해결 대통령 약속 지켜져야"
15	2019-04-02	B	노동당 제주 "국민적 사업으로 4·3항쟁 정신 계승하라"
16	2019-04-02	B	제주의소리·아이엠피터의 ‘이름 없는 역사 4·3’
17	2019-04-02	B	4·3 예비검속 희생자 위해 제주·일본 뜻 모으다
18	2020-03-03	B	“4·3 다시 오면 차라리...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사과 고마워”
19	2020-03-09	B	"우리 사라지면 자녀들 4·3 몰라...역사에 꼭 기록해야"
20	2020-03-10	B	제주4·3특별법 개정 무산? 與 “야당이 발목” vs 野 “여당이 무능”
21	2020-03-12	B	“지금도 4·3 악몽 시달려, 교육청 4·3교육 적극 나서야”
22	2020-03-16	B	16년만에 4·3추가진상보고서 발간...50명 이상 집단학살 26건
23	2020-03-16	B	"4·3 미국의 책임 커...지금도 이익 위해 군대 주둔"
24	2020-03-19	B	"영양실조, 폭도자식 낙인...다시는 4·3 비극 되풀이 말아야"
25	2020-03-20	B	‘리턴매치’ 오영훈 vs 부상일, 제2공항-4·3특별법 ‘불꽃’
26	2020-03-24	B	4·3수형기록 발급 절차 대폭 개선...제주도 직접 수령 가능
27	2020-03-25	B	올해 4·3추념식 대폭 축소...참석자 150여명 간소화
28	2020-03-25	B	진상규명→명예회복, 다음은 배보상...21대 국회로 간 4·3특별법
29	2020-03-25	B	오영훈 ‘기초 부활’ vs 부상일 ‘시장 직선’...4·3특별법 ‘배·보상’ 한목소리
30	2020-03-26	B	‘끝나지 않은 전쟁’ 4·3수형인들의 누명... 마침표는?
31	2020-03-27	B	‘지정 기간에만 신고?’...4·3 피해자 상설신고 및 트라우마센터 법제화 언제쯤?
32	2020-03-27	B	“절대 돈 청 사람은 못 사는 거...” 총선 앞둔 4·3 유족들의 기억
33	2020-03-27	B	정부, 4·3추념식 앞두고 선물...8059명 추가 유족결정
34	2020-03-29	B	4·3 선거쟁점화 미래통합당 "오영훈-위성곤 허위사실유포"
35	2020-03-30	B	70여년 애타게 주검 찾는 유가족들 ‘더딘 유해발굴’ 또 온다
36	2020-03-30	B	4·3특별법 개정, 여·야 모두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
37	2020-03-31	B	전교조 제주 “교육청, 교육위 4·3교육 더 지원해야”
38	2020-03-31	B	통합당 이채익 "文 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해"
39	2020-03-31	B	70여년 후에야 드러나기 시작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40	2020-04-01	B	“제주1호 공약” vs “그럼 4~5월 처리하자” 여·야, ‘4·3민심’ 공략...립서비스 댄 치명타
41	2020-04-01	B	미래한국당 비례 7번 정경희 "제주4·3 좌익 무장반란" 논란

42	2020-04-02	B	민주당 제주 “20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 위해 혼신”
43	2020-04-02	B	“4·3 영령 위로, 총선 민심 잡아라” 정치권 제주 출동
44	2020-04-02	B	72년전 10대 소년들에 가해진 국가폭력...‘아흔 노인들’ 재심 촉구
45	2020-04-02	B	민생당 제주 “당리당락 떠나 4·3특별법 개정해야”
46	2020-04-02	B	민주노총 제주 “4·3민중항쟁 정명, 미국 사죄 촉구”
47	2020-04-02	B	4·3단체 “정경희 4·3망언 분개..한국당 비례후보 사퇴 촉구”
48	2020-04-02	B	통합당 “4·3 특별법 개정안 제주 1호로 처리 약속”
49	2021-03-02	B	문 대통령 “4·3특별법 매우 뜻깊은 진전...후속조치 이행”
50	2021-03-03	B	한 달 앞 제주4·3추념식 ‘참석 인원도 미정’
51	2021-03-09	B	퇴임 이낙연 “4·3특별법 전면개정 숙원 해결, 큰 보람”
52	2021-03-12	B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주4·3 유해발굴 사업 재추진
53	2021-03-16	B	4·3 당시 군사재판 335명 '무죄'...72년 앓는 유족 恨 풀렸다!
54	2021-03-16	B	"한평생 멎든 가슴 이제사 풀어접수다"...수형인 명예회복
55	2021-03-18	B	추미애 "제가 4·3 해결 은인? 유족과 제주도민이 주인공"
56	2021-03-19	B	정세균 “제주4·3 완전해결, 후속조치 차질없이 하겠다”
57	2021-03-22	B	제주도교육청, 4·3 교육주간 선포...각 학교 2시간 교육
58	2021-03-22	B	행안부 차관 “제주4·3 위자료 유족 의견 적극 검토”
59	2021-03-23	B	1만2000여명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인정 심사 시작
60	2021-03-24	B	열흘 앞 다가온 4·3추념식, 참석인원 아직도 ‘공공’
61	2021-03-25	B	제주4·3추념식 150명 ‘돛박곳이 활짝 피었수다’ 확정
62	2021-03-25	B	“제주4·3-조총련 연루 간첩조작사건 명예회복·지원 필요”
63	2021-03-29	B	봄을 흔드는 일부 보수단체들...제주4·3 폄훼·왜곡 ‘여전’
64	2021-03-29	B	“농민·아녀자...‘제주4·3 희생자’, 그들은 죽어서 공산주의자가 됐다”
65	2021-03-29	B	제주4·3 민간인 학살,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66	2021-03-30	B	완결 아닌 또다시 시작되는 여정 ‘제주4·3과 배·보상’
67	2021-03-30	B	진실을 쫓는 사람들’ 제주4·3 숨겨진 미군의 진짜 모습
68	2021-03-31	B	제주4·3 광풍 몰아친 가시리...73년만에 빛을 본 유해 3구
69	2021-03-31	B	증언자 떠나는 제주4·3...평화재단 연구 역량 강화 절실
70	2021-03-31	B	끝나지 않은 장정 ... 진실을 향해 가는 4·3 시곱바늘
71	2021-04-01	B	한 마음, 한 뜻...제주4·3 기억하는 대학생들
72	2021-04-01	B	제주-전남, 4·3과 여순 10·19 평화·인권교육 공동 수업
73	2021-04-01	B	제주여민회 “4·3 말해줄 제주 여성분들 찾습니다”
74	2021-04-01	B	“왜 내 아버지만!”...4·3 명예회복에도 늙은 아들 恨은 더 깊어졌다
75	2021-04-01	B	“4·3 집단학살은 국제법 위반...美 직·간접적 책임 있다”
76	2021-04-02	B	김창룡 경찰청장 ‘제주4·3 추념식’ 참석 ‘현직 최초’
77	2021-04-02	B	제주 4·3희생자추념식 역대 최소 인원 실내서 개최
78	2021-04-02	B	“4·3 완전한 해결 노력” 제주 정치권 한목소리
79	2021-04-02	B	누워있는 백비 일으켜 세울 제주4·3 올바른 이름은?
80	2021-04-02	B	제주4·3평화공원에 ‘셀프 기념비’ 세운 얼빠진 공무원들
81	2021-04-02	B	“제주4·3 당시 미 군정, 목인·방조 아닌 지시·조장 역할”
82	2021-04-02	B	박범계 장관 “4·3 희생자 일괄재심 신속하게 대검 이첩”

순번	날짜	언론사	제목
1	2019-01-18	C	[뉴스줌인](리포트) 70년 만에 '무죄'
2	2019-03-28	C	70년 만에 벗은 누명...국가 책임을 묻는다
3	2019-04-02	C	고향 떠난 4.3생존수형인
4	2019-04-03	C	4.3다큐 희춘
5	2020-03-30	C	'6.25 영웅' 맥아더, 4.3 학살 책임있나?
6	2020-03-31	C	몸에 새긴 상처...후유장애는 '불인정'
7	2020-04-01	C	활주로에 묻혀버린 진실..사라진 사람들
8	2021-03-29	C	(4.3 미래를 듣다) 현기영 작가
9	2021-04-02	C	밝혀지지 않은 진실...추가 진상조사는?
10	2021-04-03	C	수상한 섬 이야기 : 제주 4·3간첩 조작 사건

순번	날짜	언론사	제목
1	2019-04-01	D	어머니는 굴 밖으로 울음소리가 새지 않도록 빈 젖을 물렸다
2	2019-04-01	D	국회여, 응답하라...1년째 표류하는 4.3특별법 개정안
3	2020-03-16	D	집단학살 26건 더 있다...‘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 발간
4	2020-03-19	D	72주기 다가오는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는 감감
5	2020-03-23	D	“유족들 고대하 ‘4·3 추가 진상보고서’ 16년이나 걸렸네요”
6	2020-03-30	D	평생 고통 속에 산 4·3 경험자들 ‘후유장애인’ 됐다
7	2020-04-02	D	70여년 전에 잃어버린 제주 마을, 50곳이 더 있었다
8	2020-04-02	D	그들은 어디로 갔나...4·3 행방불명인 5천여명 추산
9	2021-04-02	D	[제주 4·3] 73년 멎든 가슴, 이제야 ‘무죄’...법정에 선 아들딸들

청년, 4·3의 미래를 말하다-청년의 시선으로 본 4·3운동의 과제

현 경 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제주 4·3은 어느덧 73년이 흘렀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의 청년은 언제나 4·3과 함께했다. 1960년 제주대학교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부터 1987년 제주대학교에서 시작한 첫 희생자 위령제까지 이를 통해 청년의 역사의식 그리고 의식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행동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진실규명과 화해’라는 과거청산의 이행기 정의 모델로 제주 4·3은 30여년의 짧은 진상조사 기간이라는 한계를 딛고 진정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 4·3은 이 시대의 청년과 함께할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청년세대 그리고 연구자, 문화 활동가는 외로이 제주 4·3과 마주하며 학문적, 실천적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청년세대가 이끌어 나가야할 제주 4·3이라는 역사에서 청년이 소외되는 현실은 어쩌면 4·3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선 진실규명과 화해를 기반으로 과거를 해결해나가는 제주 4·3의 특성상 진실규명이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청년이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이전 세대의 제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했던 실천적 노력과는 다른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4·3운동의 과제로서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세대가 이어질수록 4·3의 체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연구의 필요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을 면밀히 규명해야하는데 높은 수준을 요구하므로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최종 목표인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조차 어려워진다. 청년 세대의 학문적 노력이 이어지기 위해 이전 세대는 청년의 관심을 존중하고 4·3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1.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청년 연구자의 연구주제 등의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2.지속적 지원을 통해 4·3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성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3.누구나 4·3연구에 장벽을 느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청년의 학문적 접근은 매우 극소수의 특정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청년세대의 단일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미래세대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목표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학문적 노력을 기반으로 실천적인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한다. 실천적 노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국회 앞 1인 시위, 4·3 희생자 추념식(부대행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이다. 이처럼 학문적 노력만큼이나 실천적 노력이 중요한 까닭은 실제 4·3특별법이 국회 다수의 동의를 통해 한 발 딛을 수 있던 이유가 제주 4·3이 제주의 역사에서 더 나아가 전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문화 활동가들이 제주 4·3에 공감을 불어넣을 작품

을 만들었고 실제 다수의 국민은 이념적 시각을 넘어 제주 4·3을 바라보게 되었다. 물론 여러 학문적 노력이 동반되었고 값진 연구를 펼쳤지만 이런 다양한 실천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주 4·3이 여전히 외로운 역사, 제주만의 역사에 그쳤다면 전부개정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본다. 이에 제주 4·3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기 위해 공감대 형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4·3의 대중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긴다. ‘대중화’는 청년세대가 가장 잘 성취해낼 수 있는 목표이다. 유튜브부터 각종 sns, tv프로그램, 각종 광고까지 이제 문화는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는 시대를 맞았다. 다섯 살 유아부터 여든 살 노인까지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3의 대중화에 힘쓸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4·3을 담아 의미를 전하고 청년 세대의 톡톡 튀는 발상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디어로 4·3을 표현한다면 ‘4·3 대중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실천적 노력, 4·3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세대와 다양한 문화 활동가에게 역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결국 4·3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평화의 상징, 화해의 상징이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역사로 국민의 정서에 다가갈 것이다.

오랜 이야기지만 14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피렌체에서 이어졌던 르네상스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었을까도 모른다. 메디치 가문은 지속적으로 학문·문화예술에 아낌없이 지원했고 작은 마을 피렌체에서는 세계적인 문화를 창달해냈다. 제주 4·3이 르네상스처럼 문화적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메디치 가문과 같이 청년 세대의 4·3에 대한 관심에 많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성과주의의 관점에서 4·3의 학문적 노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이든 그 가치를 존중하고 다음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노련한 연구자가 제시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몇 명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아니라 4·3의 의미를 알리고 대중화하는 데에 진일보 했음을 인정하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 더 창의적인 문화의 창달과 대중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4·3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도움을 준다면 4·3은 진정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